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정상희 부연구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방향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함. 역동적인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달성가능한 성장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발전까지 고려한 성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포용적 성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경제성장의 기회를 부여받고 이로 인한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함.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동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연대보증 폐지 및 창업보험 도입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산학협력 활성화, 숙련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소비지출 절감 등 실질적 경제민주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상권관리기구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I. 논의의 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경제는 필수적인 요소임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력산업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함
  - 세계경제의 성장정체, 넷 크래커 상황에서의 경쟁격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기존의 산업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
  - 수출의존도 심화는 결국 수출시장 및 세계시장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력산업의 수출 위축 → 재벌집단의 매출액 하락 →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심한 국가는 수출을 통한 성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수출대기업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 또한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II.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방향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방향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함

- 역동적인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창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성장임
  - 역동적인 성장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역동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 세대만을 생각하는 성장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발전까지 고려한 성장
  - 지속가능한 성장은 역동적 성장으로 나타난 성과를 더욱 발전 및 보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
  -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포용적 성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고 경제성장으로부터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함
  - 포용적 성장이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포용적 성장은 역동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면서 혁신경제의 선순환을 유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함

## III.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정책

### 1. 역동적 성장

□ 신성장 동력 발굴

- 신성장동력 발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하여 기술구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와해성 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 신성장동력 발굴에 있어서 원활한 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금융지원, 인력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가칭, 신성장동력 위원회) 구축<sup>1)</sup>
  - 신성장동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능하지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구현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와 인터넷 분야의 와해성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1) 신성장동력 육성은 리스크가 크고 성과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정 정부부처 및 정권 내에서 육성 및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함

## □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 창업자의 연대보증은 창업 실패시 재기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소가 필요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사업자 연대 보증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법안(홍종학 의원)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

### ○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창업보험 도입

- 창업보험은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실패시 관련 부채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도시에도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유지함에 따라 회생의 기회가 존재함
- 초기 창업보험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며 가입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을 산정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금액을 벗어난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재창업 및 기업회생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창업보험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2. 지속가능한 성장

## □ 연구개발 역량 강화

### ○ 원천기술,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될때까지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함<sup>2)</sup>

###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안이지만 국내에서 산학협력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sup>3)</sup>
-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 자체 연구개발에 대학에서 기술자문, 인력교류, 정보제공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 구축필요
- 이와 함께 대학과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가능 대학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서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다수의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2011

2)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적발된 건수는 407건으로 그중 73%가 중소기업이며 기술유출로 기소된 719명 중 형이 확정된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6.9%(32명)에 불과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자료.

3) 국내 중소기업의 산학협력률은 2004년 67.3%에서 2010년 44.4%로 지속적으로 감소. 박진우·이원홍(2014), '창조경제,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에서 해답을 찾다!', IIT Trade Focus, 학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년 기준 23.6%<sup>4)</sup>로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하여 기술공급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음

- 연구개발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술공급자-중개기관-기술수요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필요
-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기술공급자에게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과급과 함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 등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추가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장려

#### ○ 현장과 결합된 숙련인력 육성

-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발달된 독일의 직업훈련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직업학교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듀얼 시스템으로 1주일 중 3일은 산업현장에서 나머지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로 3년제 과정으로 이루어짐<sup>5)</sup>
- 독일의 현장 실습이 강화된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을 국내 실업계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 접목하여 숙련된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실업 해소

###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공공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 컨설팅은 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속인 성장과 혁신에 효과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해당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컨설팅 활성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지역 거점 별로 공공컨설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대학, 변호사, 회계사, 은퇴한 전문가 등의 인력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3. 포용적 성장

### □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수준의 확대

- 복지수준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성공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 따라 비용으로써의 복지가 아니라 투자로써의 복지로 인식전환이 필요함

####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실질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 증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근로소득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
- 이와 함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 기준안 마련이 필요<sup>6)</sup>

4) 김정연(2013),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현대경제연구원(2013),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6) 실질임금 1% 증가시 GDP는 0.68~1.09% 증가,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증가 그리고 고용은 0.22~0.58% 증가.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지역사회연구소.

○ 비소비지출 절감

- 비소비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기준금리에 맞게 제2금융권의 금리도 낮추도록 해야 함<sup>7)</sup>
- 이와 함께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미사용 통화시간<sup>8)</sup>에 대한페이백 서비스, 통화시간 세이브, 분리요금제의 요금 할인폭 확대(기존 12%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25~30%)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 방안은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정망 마련이 필요

- 가계부채 채무 조정 및 파산신청 방안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주거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기존 주택대출은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여의치 않은 재취업은 자영업 창업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 과당경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 따라서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재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권관리위원회 활성화

- 상권관리위원회는 상권개발과 소상공인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전문기구로 이를 통해서 상권 재개발, 각종 분쟁해결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
- 상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통하여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 동별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서로 연결하는 O2O(Online-to-Offline)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수료, 광고비, 대금회수기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함
- 대표적인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인 요기요의 수수료는 12.5%, 배달의 민족은 5.5~9% (외부결제수수료, 부가세 제외)
- 대부분의 배달서비스는 동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통하여 동별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지도 제고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7)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발표에도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유지부동인 상태로 약관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10%를 넘어선 곳은 흥국생명(10.5%), 현대라이프(10.5%), 교보생명(10.5%), 동양생명(10.25%), 라이나생명(10%), PCA생명(10%)이며 나머지 9% 중후반대의 대출금리를 적용(중소기업신문, 2014.11.06.).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인상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브레이크뉴스, 2014.11.07.)

8)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G 5만4천원 요금제 가입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의 25%, LTE 6만2천원 요금제 가입자는 32%를 미사용